

최저임금위원회, 대대적 개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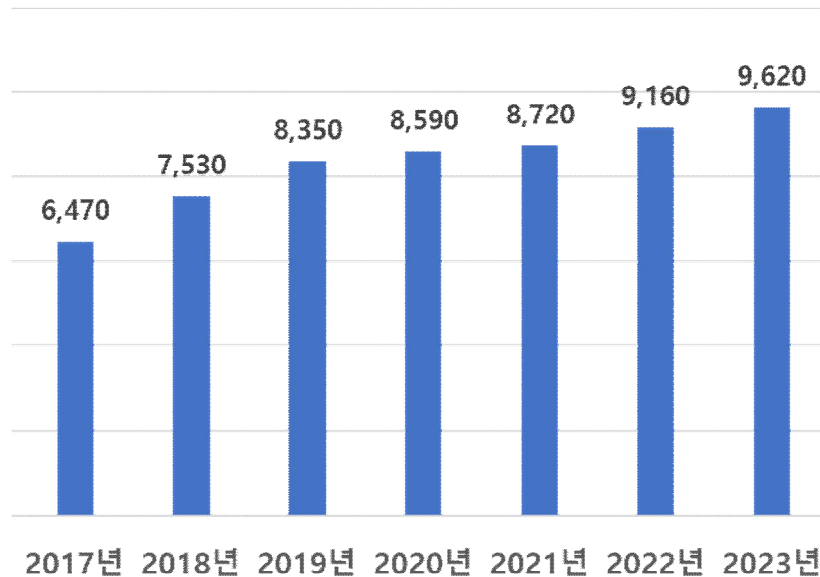
안준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

□ 코로나19·세계 경제 침체에도 2023년 최저임금 5% 인상 결정

-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,620원으로, 2021년(9,160원) 대비 5% 증가함.
- 최저임금위원회는 5% 증가 근거를 ‘경제성장률(2.7%) + 소비자물가상승률(4.5%) - 취업자증가율(2.2%)’로 밝혔음.
-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유지(9,160원)를 요구하였음.
-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9,620원 인상을 결정하였고,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됨.

<그림 1> 최근 6년간 최저임금 결정 현황

(단위 : 원)



출처: 최저임금위원회

[팩트&파일]

□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최저임금위원회

<표 1>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합의 상황

연도	최초요구안 근로자측(인상폭) / 사용자측(인상폭)	합의 여부	결정 최저임금(인상폭)
2009년	4,760원(26.3%) / 3,770원(동결)	합의	4,000원(4.9%)
2010년	5,150원(28.7%) / 3,770원(-5.8%)	합의	4,110원(2.8%)
2011년	5,180원(26.0%) / 4,110원(동결)	실패	4,320원(5.1%)
2012년	5,410원(25.2%) / 4,320원(동결)	실패	4,580원(6.0%)
2013년	5,780원(26.2%) / 4,580원(동결)	실패	4,860원(6.1%)
2014년	5,910원(21.6%) / 4,860원(동결)	실패	5,210원(7.2%)
2015년	6,700원(28.6%) / 5,210원(동결)	실패	5,580원(7.1%)
2016년	10,000원(79.2%) / 5,580원(동결)	실패	6,030원(8.1%)
2017년	10,000원(65.8%) / 6,030원(동결)	실패	6,470원(7.3%)
2018년	10,000원(54.6%) / 6,625원(2.4%)	실패	7,530원(16.4%)
2019년	10,790원(43.3%) / 7,530원(동결)	실패	8,350원(10.9%)
2020년	10,000원(19.8%) / 8,000원(-4.2%)	실패	8,590원(2.8%)
2021년	10,000원(16.4%) / 8,410원(-2.1%)	실패	8,720원(1.5%)
2022년	10,800원(23.9%) / 8,720원(동결)	실패	9,160원(5.05%)
2023년	10,890원(18.9%) / 9,160원(동결)	실패	9,620원(5%)

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, 민주노총 보도자료

-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, 노동자위원 9명, 사용자단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에 실패하여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. 최근 15년간 2009~2010년을 제외하고는 13년 연속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실패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음.
- 평균적으로 근로자 측(노동자위원 측)은 매해 평균 33.5%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, 사용자 측은 대부분 동결 내지 최저임금의 감소를 요구하는 등 서로 수평선을 걷는 모습을 보임.
-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음.

[팩트&파일]

- 공익위원 9명(임기 2021. 05. 14.~2024. 05. 13.) 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과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음.
- 또한 사용자단체 대표자도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.

□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부결

<표 2 국가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적용>

국가명	최저임금 차등 지급 적용 여부
한국	1988년 한 해만 차등 지급 / 1989년부터 지금까지 동일 적용
그리스	사무직과 비사무직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
네덜란드	성인·청소년 최저임금 상이(성인의 30~85% 수준)
미국	연방 최저임금(7.25달러)과 주별 최저임금 상이
캐나다	각 주에서 결정 / 업종별 상이
일본	지역별·산업별 상이
영국	각 연령대별 노동자와 수습생의 최저임금 상이 (16~17세, 18세~20세, 21세~24세, 25세 이상)
프랑스	18세 미만 노동자나 수습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0~20% 감액
중국	각 직할시, 성, 자치구별 최저임금 상이
인도네시아	주·시·군·구별 최저임금 상이
호주	122개 직업군으로 나뉘 직업군별 최저임금 상이
칠레	18세 미만·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74.6%만 지급
태국	12개 기술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 책정

출처: 최저임금위원회

-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서 부결 결정을 내림.
-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,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임.
-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‘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

[팩트&파일]

정할 수 있다'고 명시되어 있음.

-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한 해에만 산업별로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황임.
- 그러나 OECD 회원국들과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이 아예 없는 국가들(이탈리아,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등)을 제외하고는 나이, 지역, 직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함.

□ 경제 논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필요

-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 중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대표자가 없어 시장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기에 부족함. 9명의 공익위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을 개혁하여 대다수의 시장을 구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바꾸고,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등 경제 논리와 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이 필요함.